

# ISSUE & FOCUS

Newsletter 2017-11

## 미래 한중관계와 한국외교의 방향

조철호 광운대학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1. 제19차 당대회와 시진핑 2기 출범

10월 18일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회의(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무려 3시간 24분에 걸쳐 68쪽에 3만여 단어 분량에 달하는 보고서를 연설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개막연설에서 신시대를 언급하면서 신사상, 신목표, 신장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자신의 국정운영지침인 치국이정이론을 담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산당 창당(1921년) 100년인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건국{1949년} 100년인 2050년까지 부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19차 당대회를 통하여 시진핑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에 제1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시진핑 2기의 성격을 평가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 관련 한중 갈등의 함의와 시사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대응하여야 할 대중 한중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1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평가: 중국적 특색을 넘어 중국적 보편으로

일반적으로 제19차 당대회 이후 출범한 시진핑 2기에 대해서 주요 해외 외신은 시 주석의 막강한 1인 권력 구도 아래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통해 세계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어, 시진핑 자신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당장에는 마오쩌둥 사사와 덩샤오핑 이론이 이름과 함께 명기되어 있다. 장쩌민의 삼개대표론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도 당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당대회에서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임위원을 모두 60대로 구성하면서 차차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외 외신은 향후 10년간 시진핑의 집권이 지속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집단지도체제 대신 시진핑 일인독주체제의 확립으로 논평하고 있다.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정하여 현재의 권력자 1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덩샤오핑이 확립한 격대지정(隔代指定) 원칙이 폐기된 것을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 2기가 보다 나은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더 보완하여야 하는 시각과 관점을 모색하는 비판적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언급하면, 시진핑 사상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해서는 중국적 특색을 넘어 중국적 보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절대빈곤,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탈피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적 소강사회 건설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글로벌 소강사회 건설로 확대해가야 한다. 특히 중국이 시진핑 사상 아래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정치 민주화와 대외적으로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국가 중심적 인식을 넘어 지역중심적 또는 세계 중심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첫째, 중국이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정치 민주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법의지배를 강조하였다. 또한 동시에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지도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며 종엄치당(從嚴治黨)을 강조하였다. ‘법의 지배와 당의 지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중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다양해진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법적 제도로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앞으로 증대되는 정치 민주화를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의 확충 없이는 세계적 초강대국으로의 순조로운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이 세계적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를 창출하여야 한다. 제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국가 간에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대외관계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또한 동시에 자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역사문제, 영토분쟁과 같은 상반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의해 지속되는 구조적 갈등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 강요에 의해서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호의존성이 높은 세계화 시대에서 중국이 세계적 초강대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상호 공감을 창출할 수 있는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 구축에 모범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중국이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존경 받기 위해서는 중국 민족중심적 또는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지역중심적 또는 세계중심적 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용하여 중화민족의 부흥만을 달성하려는 중국몽은 관련 주변 국가의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반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 또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중국몽은 관련 주변 국가의 지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진정한 세계적 초강대국의 지위는 보이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치지도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3. 사드 배치 한중갈등 관련 합의와 시사점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d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본격적인 한중갈등 논의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의 강행과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하여 한미 간 사드 배치를 논의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특히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가속화함에 따라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갈등이 본격화 되었다. 중국은 한국 단체관광 금지,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한을 비롯한 한류를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 롯데를 비롯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영업 제한 및 중단 조치 등을 사드 배치에 대한 비공식적 보복조치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제19차 당대회 전후로 2017년 10월 13일 한중간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을 비롯하여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갈등이 해소되는 조짐을 보여왔다. 마침내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갈등은 봉합되었다. 이에 사드배치 관련 한중 갈등이 주는 합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에 대해서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은 갈등 해소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반면 한중 양국의 기본 입장과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머문 점에서 근본적 해소에는 미진하였다고 판단된다. 본래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 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로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안보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와 철수를 결정하는 주체는 한국, 미국, 중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경우 사드 배치를 지속하여야 하고, 반면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비핵화로 나갈 경우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이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노력을 더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국제적 수준에서 G2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국은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 책임대국론을 표방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의 지역적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북중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보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이 자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불법국가로서 북한의 비정상적 활동을 옹호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치할 경우 중국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의 이미지 상실로 인한 국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관계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적 수준에 도달하여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갈등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한중 양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 사드 갈등에 의해 중국 내에서 혐한감정이 확산되었고, 한국 내에서 반중감정이 확대되었다.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갈등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정치적 조치가 아닌 경제적 조치를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차후에는 적극적 투자를 꺼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4. 미래의 한중관계와 한국외교의 방향

올해 한중 양국은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제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2기가 출범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앞으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맞이하여 한국이 어떠한 대중국외교를 전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의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외교를 지속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설득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한반도 분단체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필요로 한다. 차제에 북한 핵을 포함하여 북한체제에 대한 정책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초한 냉전적 북중관계를 탈냉적 북중관계로 전환시키려는 대중국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갈등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아직 잠재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 사드 배치 및 철수의 기준, 사드 배치의 유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중 합의에서 나왔듯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최소의 방어적 수단이다. 또한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상태에 도달해 있는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는 군사적 해결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해결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은 북한의 핵개발 지속 여부에 결정된다는 사드 배치 및 철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로서 중국의 안보에 직·간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불법국가로서 북한의 비정상적 활동을 옹호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치할 경우 중국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의 이미지 상실로 인한 국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지지를 도출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냉전적 북중관계는 점차적으로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논리로 탈냉전적 북중관계로 새롭게 변모시키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통일한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부합할 것이라는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이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북아 지역협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북아 지역협력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 등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북중관계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과의 특수성이 아닌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올바른 북중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미 한중 양국은 전략적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2000억 달러 이상의 교역규모가 될 정도로 높아진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중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제1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될 정도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보다 높은 비중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 전문가들은 기존의 북중관계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중관계보다 한중관계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었다. 앞으로도 우호적인 한중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한 중국의 국가이익으로 자리 잡아 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시진핑 2기가 추구하려는 중국몽의 달성과정에서 우호적인 한중관계 유지는 더 중요한 중국의 국가이익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한중관계 유지는 북한 핵문제 해소로 한반도

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시장경제 메카니즘 도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체제가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우호적인 한중관계의 유지는 한반도의 긴장해소 및 평화유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5. 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지역협력의 토대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왜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통합으로 나가지 못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아시아 역사를 주요 시대별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아시아의 국제질서를 평화, 소통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 상황과 아시아 평화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미래의 아시아 평화를 위한 바람직한 소통의 대안으로 한반도 통일을 제시한다. 역사적 거시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와의 상관관계를 제국주의, 냉전, 탈냉전시기별로 각각 나타나는 소통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적 교훈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아시아 평화는 제국주의의 충돌이 전쟁으로 전개되는 자기중심적 일방적 소통이었다. 러일전쟁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 주도권 관련 러·일 제국주의의 충돌이었다. 동아주의, 아시아연대론, 동양평화론과 같은 범아시아주의가 존재하였지만, 아시아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하는 자기중심적 소통으로 현상타파적 국제질서가 지배하였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위상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와 직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둘째, 20세기 냉전 시대의 아시아 평화는 미·소 냉전체제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의 단절로 전개되는 자기중심적 단절적 소통이었다. 한국전쟁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 주도권 관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충돌이었다. 아시아의 대립과 갈등은 냉전적 사고의 산물로 타국에 대한 자국의 가치와 신념을 강요하는 자기중심적 단절적 소통이었다. 20세기 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위상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분단은 아시아의 분단과 직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셋째, 21세기 탈냉전 시대의 아시아 평화는 세계화와 지역통합 속에서 상호의존적 통합적 소통을 필요로 하고 있다. G2 시대의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중국경계론과 중국협력론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에 의하여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상호견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역사문제와 해양분쟁 등에서 보여주듯이 상이한 가치와 관점에 의한 민족주의의 분출과 지역갈등으로 인하여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평화는 불확실성,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지각에서 현상타파정책이 발

생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반면 FTA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주의의 증대와 지역협력으로 인하여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평화는 상호의존적 소통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처럼 탈냉전기 동아시아에서는 자기중심적 일방적 소통과 상호의존적 통합적 소통이 동시에 존재하는 소통의 과도기적 혼돈을 겪고 있다. 과거지향적 소통을 종식하고 미래지향적 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소통지로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통합의 토대를 제공하여 아시아통합을 완성시키는 토대를 마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시아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를 실현시키는 한국외교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